

경기도 'Milk School' 농촌 관광자원 모범사례로

경기도 내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이 큰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11개소 농장에서 'Milk School'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소득이 전체 19억여원에 이르고, 농가당 방문객은 1만 2천명, 평균소득이 1억 7천여만원에 달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ilk School'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우유짜기, 송아지 우유먹이기, 건초주기, 치즈 만들기, 우유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유가공품의 제조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낙농체험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용인시 원삼면 농도원 목장을 시작으로 전체 낙농가 3천여농가 중 낙농체험이 가능한 목장 11개소를 선정해 각 2억원씩 6년간 22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용인=농도원목장, 청계목장, 화성=진주목장, 신하늘목장, 김포=꿈목장, 이천=와우목장, 파주=모산목장, 고구려목장, 포천=아트팜, 여주=은아목장, 연천=애심목장 등 총 11개의 Milk school 목장이 운영 중이다.

초기 체험객은 전체 1만 2천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12만 4천명이 찾아 FMD 등 질병 여파로 피해가 컸던 낙농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Milk School' 낙농체험은 기존의 목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아름답게 변화된 목장 현장은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도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조사료 자급률 90% 목표로
생산·유통 지원에 집중**

정부가 내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ha로 확대함으로써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높이기 위해 생산장려금 지원과 생산연합체 운영 등 조사료 생산·유통부문에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일 '조사료 증산 추진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한데는 앞서 2011년 10월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조사료의 낮은 수익성과 이모작 기피 경향으로 경종농가의 참여가 미흡해 당초 목표로 했던 자급률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33만ha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6만8000ha에 그쳤으며, 자급률도 2010년 82%에서 지난해 80%로 하락하는 부진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종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사일리지제조비의 국비보조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또 경종농가에서 동계작물 재배참여가 용이토록 '동계 논 사료작물 생산연합체'를 구성해 이들의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유휴 산지를 활용한 임간초지 조성과 간척지와 하천부지에 사료작물을 확대하고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유도하는 한편 조사료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키 위해 국비 보조율을 조정하고 조사료 세부내역 사업도 통폐합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도 농업기술원 등에 분석장비 지원 등을 통한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2015년부터는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을 현행 '무게'에서 '무게 및 품질'로 개편, 품질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사업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까지 조사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청과 협조해 조사료 생산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동계 유휴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유 매출 뚝...생수·과즙음료 판매 ↑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형마트에서 전체 우유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수와 과즙, 이온음료 등 대체재 판매는 늘었다. 대리점 강매 행위인 속칭 밀어내기 가

업계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남양유업 불매운동의 영향이 우유 소비 자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5월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남양유업 전 영업직원의 욕설 음성파일' 유포 이후 1주일간 우유 매출은 2주 전보다 5~8%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3일에서 9일까지 전체 우유 판매를 2주 전 같은 기간인 지난달 19일에서 25일까지 매출과 비교한 결과 8.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요구르트 매출도 2.8% 줄었고,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은 15.3%나 판매가 급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우유는 12.4%, 요구르트는 8.5% 각각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각종 음료수 매출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과즙음료는 2주전과 비교해 24.8% 판매가 늘었고, 이온음료는 증가율이 88.8%에 달했다. দু유도 같은 기간 15.2%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생수 판매는 2.1% 소폭 상승했다.

B대형마트에서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체 우유 판매를 2주 전 같은 기간인 지난달 20일에서 25일까지 매출과 비교한 결과 5.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우유 매출은 3.1% 떨어졌다. 분유도 전년비 5.8% 하락했다. 이에 반해 생수 판매는 2주 전보다 15.6% 증가했고, 탄산음료 매출도 9.4% 늘었다. 비타민 음료는 3.5%, 냉장 과즙음료는 1.4% 각각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C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우유 매출은 2주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하락률이 5%에 달했다.

남양유업 제품만 놓고 보면 우유 매출은 2주 전보다 50% 떨어졌고, 분유도 5.6% 하락했다. 커피는 3.8% 감소했다. 하지만, দু유 매출은 2주 전보다 8.0% 증가했고 생수 판매도 8.3% 상승했다. 탄산음료는 2.7% 신장했고, 기능성 음료는 증가율이 43.8%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우유 전체 매출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남양 제품 자체를 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우유 대신 다른 대체재를 선택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신보 신청절차 까다로워 사료구매자금 대출 '걸림돌'

축산 농가들이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이용하고 있지만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특별사료구매자금 등 1조5000억원을 저리(1.5%)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담보력이 부족한 대다수 농가들은 농신보 신청에 나섰지만 제출서류만 20가지에다 배정받은 대출금액도 적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들까지 신용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농·축협에 방문, 신용정보 동의서에 날인토록 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군 복무자는 병적증명서까지 제출토록 해 농가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우선 기존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1700억원 중 2053농가에 31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농가당 평균 1540여만원 꼴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신보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이 낮으면 실제 대출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추경 30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1조3000억원)도 이달 중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자금을 추가대출 받으려면 동일한 형태의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한다.

포천시 양돈농가 가모(49) 씨는 "한창 돼지 출하와 입식을 해야 하는 바쁜 시기에 농신보 신청을 위해 서류를 챙기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가 씨는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자식에게 부모 빚 때문에 재학증명서를 떼오라 하고, 농사일도 바쁜데 병적증명서를 떼기 위해 거리가 먼 병무청까지 다녀오면서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와 줄 것이라면 이런 불필요한 제도부터 당장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신보 관계자는 "농장은 하나인데 부모와 자식이 공동 경영주가 돼 정책자금을 중복지원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대로 서류를 받는 것"

이라며, “개인정보법에 의해 성인자녀의 신용정보동의를 받으려면 이들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제품 수입량 10년만에 2배 이상 ↑

유제품 수입량이 10년 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1/4분기 국내 원유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2만1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국내 유제품 소비량 급증에 따라 수입량은 2002년 3만2천톤에서 2012년 7만7천톤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원유생산량은 18만2천950톤으로 전월대비 3.4% 증가했다. 유질은 유지방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고, 체세포와 세균수 1등급 비율은 각각 1.5%p, 0.5%p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기준으로 1인당 70kg을 넘어 쌀(2012년 기준 69.8kg)보다 많은 양의 유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제품 소비량의 급증에 따라 치즈, 분유, 버터 등의 유제품 수입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왔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소비량의 증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흰 우유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치즈 같은 가공제품들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축산통계 오류 정황

통계청 농축산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축산 통계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신은 한계를 넘었다. 1·4분기 돼지 사육마릿수가 예상을 깨고 1,000만마리가 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 관련 업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불신의 극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한우 사육마릿수 통계의 오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가 공식 자리에서 한우 사육마릿수는 이력제상 등록마릿수가 맞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2년 6월 말 사육마릿수는 통계청 수치보다

30만마리 이상 많다. 지자체 조사는 이력제 등록마릿수보다 2만마리 많았을 뿐이다.

그동안 한우 사육마릿수는 통계청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쇠고기이력제를 위해 등록한 수치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적게는 20만마리, 많게는 40만마리가량 이력제 등록 사육마릿수가 많았다. 관련 업계의 불신만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통계청 통계가 정책의 공식 기초자료로 활용된 탓이다. 자칫 거꾸로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은 통계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첨단 기법으로 조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현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좋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현실에 근접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서둘러 찾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정확한 통계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농식품부도 축산정책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잘못된 바로잡아 농가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내 수급예측모델 개발...총량쿼터 관리

“정확한 수급예측을 통해 낙농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것.” 최근 굵직한 현안을 해결한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가 그간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큰 현안을 해결한 다음이어서 인지 간담회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간의 진행상황은 생략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 이어졌다. 낙농진흥회는 기관별로 산재된 기초자료 융합을 통해 사육두수, 두당산유량, 원유생산량 등 정보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의 집유주체별 총량쿼터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급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부 주관 사업인 이것은 6월 중 연구기관 선정을 완료해 올해 말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인 집유, 배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진 물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배송 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낙농진흥회는 올해 9월까지 전자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업체 및 조합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낙농진흥회 조재준 부장은 “다양한 집유 노선 제약조건을 반영한 최적노선을 편성해 집유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질병 발생 등 긴급 비상 사태시 신속한 집유노선재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IDF총회 유치를 위한 활동상황 및 낙농현장체험을 통해 소비홍보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최근 해결된 쿼터 귀속률 조정과 연간총량제 상한선 폐지로 인한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농가들에게 쿼터 구매비용 절감과 유대인상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근성 회장은 “최근 낙농현안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남은 낙농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 수급예측 정확도 높인다

안정적인 원유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예측모델이 올해 안에 개발된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낙진회·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원유 수급 기초자료를 모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육마릿수, 마리당 산유량, 원유생산량 등을 산출하기 위한 원유수급예측모델을 올 하반기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수급예측모델이 개발되면 원유 수급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집유·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배송 시스템(MTMS)도 구축된다.

진흥회는 “전국 낙농가의 위치정보 구축을 기반으로 올 9월까지 축발기금 4억원을 투입해 전자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양한 운송환경 및 운송조건을 반영한 최적의 집유노선 편성이 가능

하게 돼 집유차량 대형화 촉진은 물론 운송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흥회는 특히 개발된 전자배송시스템을 전 유업체 및 조합에 공개해 개별 중복투자를 막기로 했다.

낙농가 지난 10년간 쿼터구입자금으로만 3000억원, 정확한 전국 쿼터조사 실시 후 대책마련해야

지난 10년간 낙농가의 쿼터구입자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쿼터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급조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오교을 부회장) 제1차 회의’를 갖고 우만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을 초청해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소위원원은 “지난 10년간 낙농가가 쿼터구입자금으로 쓴 돈이 3000억원이며 그대로 빚으로 남았다”면서 “낙농만큼 스스로 수급조절을 하는 품목은 농업계에서 드문 것 아니냐”며, 정부측에 실질적인 수급조절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소위원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국 쿼터조사를 실시해 실제 쿼터량을 정확히 파악, 이를 기반으로 수급조절 협의회가 운영의 묘를 살려 집유일원화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만수 농식품부 사무관은 “다음달 중 낙농진흥회에서 전국 쿼터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분기별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생산자,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 쿼터 문제 등 제도개선 골자를 세세하게 담아 나가겠다”며, “이번 선진화 대책에는 항간에서 우려하는 농가 쿼터조정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하고 낙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향후 낙농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농가 대의를 모아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생산자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비과세·감면 혜택 사라지나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134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나왔다. 정부는 5월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어느 분야에 투입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작성됐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 13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비교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이 마련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5년간 5조2000억원의 세출이 절감된다.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저조한 농업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다만 이는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업재해보험 확대, 쌀직불금 인상 등의 국정과제를 위해 농림수산 분야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분야 예산 가운데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결과적으로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오히려 조금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입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비교세·감면 축소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교세·감면 조치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몰 도래 1년 전부터 전문기관 등을 통한 엄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설계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정비 대상으로 꼽은 농림수산 분야 비교세·감면 조치는 20여개에 달한다. 기재부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을 반대했지만, 농업계 및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4월 초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기초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복지가 필요한 농어업인을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30조원 규모인 비과세·감면 가운데 57%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농어업인을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비과세·감면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1분기 원유생산·우유소비 소폭 증가해

올해 1분기 젓소 사육마릿수 증가로 원유생산이 늘었고 우유 소비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 낙농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유생산은 젓소 사육마릿수 증가와 노페우 도태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육마릿수는 3월 착유마릿수의 경우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21만 4000마리로 나타났고 일평균 원유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5729톤으로 집계됐다.

한편 낙농가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50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의 65.5%를 차지해 전업농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젓소 산지가격은 3월 초임만삭가격이 전분기대비 2.4% 하락한 303만4000원으로 구제역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유 소비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한데다 할인행사가 확대되는 등 소비 촉진 행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2분기의 우유급식 재개, 우유 가격할인 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우유소비는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원료용 전·탈지분유 가격은 수입통관 기준의 차이로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국제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